

‘시국선언’ 대한민국

광주·전남 교수 725명도 국정쇄신 촉구

노동·종교·예술계 등 전국 확산...6·10 국민대회 긴장

광주·전남지역 대학 교수들이 사상 최대 규모로 시국선언에 동참한 데 이어, 대학생과 청소년들까지 대열에 가세하는 등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관련기사 6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최근 서울대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한 이후, 전국 대학 교수들은 물론 노동계, 종교계, 예술계까지 합세하면서 전국이 시국선언에 휩싸이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지역 3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6·10항쟁 22주년 기념일’을 맞아 광주 금남로와 여수 등 5곳에서 동시에 대규모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23개 대학 교수 725명은 9일 오전 11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광주YMCA 백제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시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변화와 반성의 기회를 보이지 않을 경우 시국선언에 서명한 전체교수 회의를 소집

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교수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총체적 국정 실패, 헌법질서를 훼손할 정도의 비민주적 통치방식, 언론 및 집회의 자유 제한, 다각적 인권 침해 사례 등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국 수습책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검찰·경찰에 대한 제도 개선책 ▲촛불 집회 및 추모 기간 중 연행·구속자 석방 ▲대북관계 개선 ▲민주개혁 정책 추진 등 5개 항의 이행을 정부에 촉구했다.

광주·전남 10개 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21세기 광주전남 대학생 연합’도 이날 오전 동구 광산동 옛 전남도청 앞에서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시국선언 행렬에 청소년들까지 동참했다.

이날 오전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의 인터넷 사이트(heemang21.net) 발표된 ‘청소년 시국선언문’에

광주·전남지역 중·고교생 216명이 서명한 것을 비롯해 전국의 3천여 청소년들이 대열에 합류했다. 광주지역 청소년들은 10일 옛 전남도청 앞에서 별도의 시국선언을 가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독교 원로 목사 33명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국가의 현 사태를 걱정하는 한국교회 원로 성명’을 채택했으며, 불교 108시국선언준비위원회도 이날 오전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이 탄압받고 있다. 정부는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인, 소설가, 평론가 등 188명의 문인들도 ‘6·9작가선언’을, 대표적 진보성향 문인단체인 ‘한국작가회의’도 시국선언문을 각각 발표한 것을 비롯 민주노동당도 ‘노동자 시국선언’에 가세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광주·전남지역 3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오후 7시 광주 동구 금남로와 여수 등 5곳에서 동시에 6월항쟁 정신을 기리기 위한 대규모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채희홍기자 chae@kwangju.co.kr



무안 양파의 계절

9일 무안 현경면 들녘에서 주민들이 양파수확을 하고 있다. 올해는 양파작황이 좋아 거래가격도 20kg에 평균 8천원선을 유지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2011학년 수능 시험

내년 11월 11일 시행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들이 치르게 되는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일이 내년 11월 11일로 정해졌다.

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1학년도 수능시험 기본계획’에 따르면 수능 시험일은 내년 11월 11일(목)이며 성적은 12월 8일에 통지된다.

시험영역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 5개로 동일하고 수험생이 자유롭게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성적표에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영역별 또는 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기재된다.

교육부는 “제7차 교육과정의 내용과 특성을 충실히 반영해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출제할 것”이라며 “특히 적정한 난이도 수준을 유지해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2011학년도 수능 시험과 관련한 세부 시행계획은 내년 3월, 시험시행 공고는 내년 7월에 각각 발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신양파크호텔
Summer Wedding Package
예약/문의: 27,000원부터
세금포함!
자세한 사항은 예약실로, 한국주식업 최정확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예약실 ☎228-4711-2
대표전화 ☎228-8000

선거법 무서워 애경사도 ‘백지봉투’ ‘회식비 우회 전술’은 알려진 비밀

지방선거 입지자들 ‘범망 피하기’ 백태

“모임을 알리는 휴대폰 문자도 한 번에 대량으로 발송하지 않고 일일이 한명씩 보냅니다.” “경로 잔치에 초청받아도 선거법이 무서워 민손으로 가죠.”

내년 지방선거(6월 2일)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를 꿈꾸는 입후보 예정자들은 벌써부터 선거법 준수와 표심얻기에서 졸타기를 하고 있다. 조금만 ‘오버’하면 선거법의 멍에 걸리고 만다. 그렇다고 손발 묶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은 없지 않는가.

단속의 눈길이 번득이지만 입지자들은 교묘한 수법으로 이를 피해간다.

광주에서 내년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A씨는 단속이 무서워 개인적인 모임 안내 문자도 컴퓨터로 대량 발송하지 않고 일일이 휴대폰으로 한명씩 보낸다. 3년 전 5·31 지방선거에서 광주 서구 모 의원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대량발송한 것이 적발돼 의원직을 상실한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입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뒤편뒤편해도 ‘얼굴 알리기’다. 그래서 주말·휴일이면 몰이 열개라도 부족하다. 산악회나 생활체육회 등 각종 모임이 개최하는 등반이나 야유회 장소를 찾아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새벽같이 지역 유권자들을 찾아 얼굴을 내민다. 물론 인사만 해야 한다. 차량 대절이나 음식물 제공 등은 ‘자살골’이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도 없다. 단속망을 피해 제3자를 통한 ‘우회 전술’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광주지역 입지자 B씨는 “선거법이 아무리 무섭다고 해도 그냥 인사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잘 아는 사람을 통해 미리 음식물 등을

미련한다고 귀뻐했다.

전남지역 모 단체장의 수행원인 C씨는 “생활체육 행사나 자생단체 모임에 단체장은 꼭 참석합니다. 그리고 인사말만 하고 떠나죠. 하지만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을 배고프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애경사에는 고전적 방법이 애용된다. 축·부의금 결봉투에 아무 글씨도 쓰지 않은 ‘백지 봉투’를 넣거나, 축근을 통해 조용히 건네는 방식이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단체장들의 직무를 빙자한 선심성 행정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신규사업이나 행사 등을 개최할 때는 반드시 선관위에 사전 문의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서울대 입시 지역할당제 도입

2011학년부터...정원 39% 입학사정관제 선발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2011학년도 입시부터 서울대 입학 정원의 38.6%에 달하는 1천200여명이 입학사정관 제도로 선발된다. <관련기사 3면>

또 기회균형선발 전형에 지역할당제를 적용해 최근 수년간 합격생이 한 명도 없었던 지역 학생들을 배려한다.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9일 기자 간담회에서 2011학년도부터 수시 지역균형선발 전형과 자유전공학부 신입

생 선발에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역균형선발 전형 선발인원 753명(24.2%) 전원을 입학사정관 제로 뽑고, 자유전공학부 수시모집 인원의 일부도 같은 방식으로 선발한다.

서울대는 2008년 입시 정원 외 모집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시범도입한 이래 선발 인원을 꾸준히 늘려 왔지만 입학사정관제를 정원 내 모집까지 확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대는 정원 외 수시모집 기회균형선발 전형의 선발 인원도 지난해 140명

(4.5%)보다 50명 많은 190명 내외(정원의 6.1%)로 늘릴 예정이다.

이 총장은 또 농어촌 등 소외지역 학생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한 기회균형선발 전형에 지역할당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체 86개 군단위 중 17곳은 지난 3년간 서울대 입학생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는데 기회균형선발 전형에서 이러한 지역이 최소 합격인원을 할당하는 등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서울대는 8월 말까지 구체적인 전형방법과 정확한 선발인원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